



법제처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7.(일) 12:00	배포 일시	2022. 3. 27.(일) 12:00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이기정 (044-200-6511)
		담당자	사무관 남수진 (044-200-651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함(「아동수당법」 개정, 4. 1. 시행).
-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4. 20. 시행).
 -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도로교통법」 개정, 4. 20. 시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함.
 -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함.
 -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 마련)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력을 증진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 감면, 시설비·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4. 28. 시행).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일
(금)



「아동수당법」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20일
(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 정부는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 및 정당한 권한 없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 금지

20일
(수)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의무 부과

28일
(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 마련

•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 감면, 시설비·운영비 용자 등 지원 가능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2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22. 3. 27. 기준)

□ 「아동수당법」 (4월 1일 시행)**【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취학아동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체)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4월 20일 시행)**【제정이유】**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및 인공지능(AI)과 융합·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4조).

- 데이터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데이터자산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제12조).
-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15조).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체)

□ 「도로교통법」(4월 20일 시행)

【개정이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함.

또한,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

【주요내용】

-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제2조, 제49조, 제50조의2 및 제156조제6호의2 신설).

- 보행자 통행방법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각각 통행하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함(제8조 및 제27조).

(소관 부처: 경찰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4월 28일 시행)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동 법안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며, 또한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체)

붙임 2
2022년 4월 시행법령 목록 (2022. 3.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1.
2	공직선거법	법률	제18790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1.
3	관세법	법률	제18583호	기획재정부	4. 1.
4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대통령령	제27704호	교육부	4. 1.
5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59호	보건복지부	4. 1.
6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18667호	금융위원회	4. 1.
7	아동수당법	법률	제18579호	보건복지부	4. 1.
8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64호	외교부 행정안전부	4. 1.
9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02호	외교부	4. 1.
10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2417호	기획재정부	4. 1.
11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1호	보건복지부	4. 1.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25호	금융위원회	4. 1.
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8580호	보건복지부	4. 1.
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83호	보건복지부	4. 1.
15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7171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1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 자원부령	제415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13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4. 1.
1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19호	국회	4. 5.
19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96호	해양수산부	4. 5.
20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8698호	해양수산부	4. 5.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8683호	행정안전부	4. 5.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8684호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4. 5.
23	풍수해보험법	법률	제18686호	행정안전부	4. 5.
24	관세사법	법률	제18722호	기획재정부	4. 7.
25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75호	환경부	4. 7.
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17호	보건복지부	4. 8.
27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87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12.
2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751호	고용노동부	4. 12.

2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873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12.
30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873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12.
3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745호	행정안전부	4. 12.
3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제18749호	문화체육관광부	4. 12.
33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873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12.
3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27호	환경부	4. 14.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8038호	고용노동부	4. 14.
36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8020호	농림축산식품부	4. 14.
37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18호	기획재정부	4. 14.
3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20호	기획재정부	4. 14.
39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8051호	국토교통부	4. 14.
4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56호	국토교통부	4. 14.
4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64호	해양경찰청	4. 14.
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054호	국토교통부	4. 14.
43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533호	행정안전부	4. 15.
44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45호	농림축산식품부	4. 15.
45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 식품부령	제514호	농림축산식품부	4. 15.
46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2535호	소방청	4. 15.
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73호	여성가족부	4. 15.
4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65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15.
49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043호	소방청	4. 15.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45호	국토교통부	4. 19.
51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8782호	문화체육관광부	4. 19.
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7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4. 20.
53	건축법	법률	제18508호	국토교통부	4. 20.
54	국가정보원직원법	법률	제18520호	국가정보원	4. 20.
5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84호	통일부	4. 20.
5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486호	국방부 행정안전부	4. 20.
5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1847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0.
58	도로교통법	법률	제18491호	경찰청	4. 20.
59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특허청	4. 20.
6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4. 20.

61	방송문화진흥회법	법률	제18515호	방송통신위원회	4. 20.
62	방송법	법률	제1851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 20.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48호	특허청	4. 20.
6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1호	산업통상자원부	4. 20.
65	상표법	법률	제18502호	특허청	4. 20.
66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8492호	행정안전부	4. 20.
6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13호	중소벤처기업부	4. 20.
6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17호	방송통신위원회	4. 20.
69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847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 20.
70	전자서명법	법률	제1847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0.
71	전파법	법률	제1848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 20.
7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98호	행정안전부	4. 20.
7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	4. 20.
74	특허법	법률	제18505호	특허청	4. 20.
7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8518호	방송통신위원회	4. 20.
7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6호	산업통상자원부	4. 20.
7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18085호	경찰청 해양경찰청	4. 21.
7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행정안전부	4. 21.
79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02호	법무부	4. 21.
80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041호	대법원	4. 21.
8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7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1.
82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8087호	소방청	4. 21.
8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14호	소방청	4. 21.
8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07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1.
85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1807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1.
86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8145호	원자력안전위원회	4. 21.
87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101호	여성가족부	4. 21.
88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8호	국세청 행정안전부	4. 22.
8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91호	국세청	4. 22.

9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7호	교육부	4. 23.
9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030호	행정안전부	4. 28.
92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 기업부령	제50호	중소벤처기업부	4. 28.
9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7호	중소벤처기업부	4. 28.
9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75호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4. 29.
9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4. 29.
9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05호	국토교통부	4. 29.
9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92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4. 30.
98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798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4. 30.